

2022년 9월 15일

제 24호

동북아역사 리포트

NORTHEAST ASIAN HISTORY
REPORT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기억하자

서종진(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923년 9월 1일, 일본 관동(關東) 지방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였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가운데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무장한 군과 경찰, 자경단이 무고한 조선인 약 6,000명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올해로 관동대지진 학살 사건 99주기를 맞이하였다. 유언비어를 둘러싼 의문, 희생자의 현황 등 조선인 학살사건의 배경과 실상을 되돌아보면서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내년 100주기를 맞이하면서 남겨진 과제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기억하자

서종진(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관동대지진 학살사건 99주기

일본 하라 다카시(原敬) 수상이 1921년 11월에 도쿄역에서 암살당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에게 경찰이 던진 첫 마디는 ‘조선인’이라는 것이었다. 2·8독립선언과 3·1운동 이후 민족독립운동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고 일본 제국 내에서 사회주의운동과 노동운동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에 일본의 관동(關東) 지방에서 마그니튜드 7.9의 대지진이 발생하였다. 당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총 10~14만여 명, 부상자 10만 3,733여 명, 피난민 약 190만 명으로 발표되었다. 지진으로 발생한 화재는 강풍의 영향을 받아 도시를 덮쳤다. 특히 점심을 준비하던 때라 화재로 인한 피해가 더 컸다. 지진 후의 계속되는 여진(余震)과 쓰나미가 덮칠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교통 통신이 단절되고 정보 입수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유언비어가 사람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유언비어의 내용은 ‘방화하였다’, ‘우물에 독을 넣었다’, ‘폭도들이 습격한다’는 등으로 그 주체는 ‘불령(不逞)한 조선인’이었다. 민중들은 자경단을 조직하였고, 다음 날인 2일에 ‘신속’하게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가운데 무장한 군과 경찰, 자경단이 무고한 조선인을 무참히 학살했다. 조선인 약 6,000명이 학살당한 이 사건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大正デモクラシー)기의 대표적 지식인인 동경대학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 교수는 이 학살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본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국민들이 조선 통치는 실패했으며 따라서 불만을 품고 있는 조선인들이 이 혼란을 틈타 무슨 일을 저지를 것이라고 믿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국민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 통치자는 깊이 자성해야 한다. 손해배상, 위로금, 국민들의 도의심, 재해 사망자 위령탑을 세워 혼령을 위로하고 국민의 반성을 도와야 한다.

통치자의 자성, 배상, 위로금, 위령탑, 국민들의 반성을 호소한 요시노의 경종은 공허한 외침에 그치고 말았다. 오히려 사건의 은폐와 조작, 왜곡이 진행되었다.

일본에서는 매년 9월 1일을 ‘방재(防災)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자이니치(在日) 코리언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혐한(嫌韓)’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우익과 역사수정주의 세력에 의해 관동대지진 학살에 대한 사실 왜곡과 부정, 책임 회피,

추모제 방해 등이 자행되고 있다. 사건 발생 99년이 지난 현재 진실규명, 추도라는 면에서 오히려 퇴행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작년 6월에 돌아가신 강덕상 선생님을 비롯하여 금병동, 박경식 등 재일동포 사학자와 야마다 쇼지(山田昭次)의 선행연구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다. 조선인과 중국인, 일본인 사회주의자 등에 대한 학살은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전개되었으나 피해규모 등 학살사건의 실상은 은폐 공작으로 오랜 시간 그 전모를 알지 못하였다. 해방 이후가 되어서야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고 당시의 실상을 알기 위한 기록 자료의 조작으로 인해 실상에 접근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관동대지진 학살사건 99주기를 맞이하였지만 학살사건의 발단이 된 유언비어의 발생과 확산을 둘러싼 의문, 희생자의 현황 등 아직도 의문에 싸인 부분이 많다. 이 글은 조선인 학살사건의 배경과 실상을 되돌아봄으로써 기억하고 남겨진 과제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2. '불령(不逞)' 재일조선인과 유언비어

3·1운동 이후 민족독립운동에서 사회주의세력이 확산되었고, 재일조선인 사회에서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접근하여 연대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1918년에 발생한 일본 민중들의 '쌀소동'과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불황, 시베리아 출병 등에 따른 사회문제로 인해 일본 정부는 반사회적인 운동에 대한 경계를 높이고 있었다. 일본 당국에게 조선인의 운동 참여와 일본인 사회주의 세력과의 연대는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당시 일본에서는 노동력 부족으로 조선인 도항규제가 해제되면서 조선인 수가 증가하였다. 조선인 학생의 사회주의 사상 접근을 위협시 하고 있던 내무성은 조선총독부와 연계하여 조선인에 대한 감시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었다. 조선인 노동자 증가는 실업률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일본인과의 갈등 요인으로 비춰졌다. 이러한 분위기는 일본 사회에서 3·1운동 이후 독립을 지향하는 조선인에게 '불령선인(鮮人)'이라는 의식을 자리 잡게 하였다. 국가에 반역하는 불령한 무리라는 의미의 '불령선인'은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서 인식되어 갔다.

1923년 관동대지진이 발생한 9월 1일 밤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조선인이 방화했다', '조선인이 동경을 향해 공격해 온다'라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발생하였다. 유언비어의 사실을 목격했다거나 방화범의 검거를 확인했다고 하는 증거는 없었다. 유언비어의 발생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 하나는 관헌에 의해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설과 아래로부터 민중들에 의해 만들어진 자연 발생적인 것이라는 설이다. 위에서부터 만들어진 유언비어라는 주장은 권력기관이 조선인 봉기라는 유언비어를 유포시켜 계엄령 시행의 명분으로 삼았다고 본다. 계엄령 하에서 군과 경찰력에 의해 학살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관헌과 연계된 민중들이 학살에 가담한 사실을 증시한다. 유언비어를 위에서 만들었다는 주장의 대표적인 연구자는 재일사학자 강덕상이다. 반면 마쓰오 다카요시(松尾尊允)의 아래로부터의 만들어진 유언비어라는 주장은 민중의 의식 속에서 일반화된 조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에 주목한 것이다.

유언비어에 대한 이러한 주장과 함께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내무성과 언론의 움직임이다. 내무성은 ‘불령’ 조선인 방화설, 진공(進攻)설, 폭동설 등의 유언비어를 공인하는 전보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지방장관에게 조선인 단속 강화를 명령하였다. 그리고 신문은 이러한 유언비어를 그대로 보도하였다. 일본 국민의 타자에 대한 차별사상이 유언비어의 근원이라고 하더라도 관헌이 유언비어를 공인하였고 계엄령을 공포하고 전파공작을 하였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3. 계엄령 선포와 자경단

계엄령 선포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란’이라는 사실 확인도 없이 9월 2일 18시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1일 밤에 산발적으로 보고되었던 ‘조선인 방화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계엄령을 강행하기 위해 명분을 세우려는 구실로 이용한 것이 ‘조선인 폭동설’이었다. 그런데 ‘신속’하게 결정된 계엄령이 선포되기도 전에 군이 출병하였다. 군의 출병이 유언비어를 사실로 인정하게 하는 근거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치안 회복의 주도 세력인 계엄군이 경찰의 안내로 조선인 거주 지역이나 피난 지역으로 ‘진격’하였다. 조선인 폭동이나 습격을 사실로 받아들인 결과는 무고한 조선인 학살로 이어졌다. 이어서 지진 피해가 심했던 요코하마(横浜)와 가나가와(神奈川)현 전역에도 계엄령이 시행되었다. 계엄군은 경찰이나 자경단의 무법 행위를 단속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력을 조선인에게 겨냥하였다.

그리고 9월 4일에는 지진 피해를 입지 않은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으로 계엄 지역이 확장되었다. 계엄 지역이 확장된 것은 학살사건 때문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자경단에 의한 사이타마 혼조(本庄) 경찰서 습격사건이다. 학살을 감행한 자경단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계엄령 구역을 확장한 명목이었다. 이들 지역에 내린 통첩과 경고를 보면 유언비어를 부정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그 결과 ‘불령선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계엄령을 결정하고 치안을 담당할 정책결정자들이 3·1운동 이후 민족운동을 진압하고 치안을 담당할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무성 대신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는 3·1운동 직후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으로 부임하였고, 경시총감 아카이케 아쓰시(赤池濃)는 총독부 경무국장을 역임하였다. 관동대지진 당시 계엄령 선포를 제안하고 결정한 치안 담당자들이 다름 아닌 미즈노 내무대신과 아카이케 경시총감이었다. 또한 계엄사령부의 책임 있는 군인과 관료들 중에는 조선과 ‘만주’, 시베리아 등에서 근무한 경력자들이 적지 않았다. 계엄군의 오바 지로(大庭二郎)는 조선주둔군 사령관 출신이었고 관동계엄사령부 참모장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는 시베리아 출병을 경험하였고 마지막 조선총독도 역임하였다.

요코하마와 도쿄 등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피난민이 넘쳐났다. 경찰력의 통제력이 무너졌고 민중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던 때에 공권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민간인들로 구성된 자경단이 결성되었다. 자경단의 본래 임무는 거주 지역의 화재 진압과 재산 보호, 야간 순찰과 치안 유지 등이었다. 내무성 조사에 의하면 자경단이 설치된 곳은 도쿄 1,593곳, 가나가와 603곳, 지바 366

곳, 사이타마 300곳, 군마(群馬) 469곳, 도치기(栃木) 19곳 등 총 3,689곳이었다. 재향군인과 소방단원, 청년회 등으로 구성된 자경단은 자연발생적으로 결성되기도 하였고, 기존에 야간 순찰을 하던 조직이 변형된 자경단, 지역에서 경찰과 연계되어 활동하였던 자경단, 경찰의 지시를 받고 조직된 자경단 등 여러 형태가 있었다. 이들 자경단 가운데에는 계엄사령부로부터 공인을 받고 활동한 자경단도 있었다. 그런데 자경단에는 ‘의병전쟁’ 탄압 등 근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이 포함되었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불령선인’ 관련 유언비어가 퍼지자 거리에 비상 구역이 설정되고 검문이 실시되었다. ‘수상한’ 사람에게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君が代)를 불러보라고 하거나 ‘이치엔 고쥬센(1엔 50센)’이나 ‘주고엔 고쥬센(15엔 50센)’과 같은 택임을 발음하게 하여 조선인을 식별하였다. 관헌과 자경단들은 ‘조선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조선인이 발음하기 어려운 일본어를 발음하게 하였다.

자경단의 폭력과 집단적 살인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의 난무와 무장한 군대의 출동, 무기 대여 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공권력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경단의 광기어린 학살은 9월 3-4일 경에 극에 달하였다. 이는 일반 일본 민중들에게도 공포감을 심어주었는데 계엄사령부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유언비어가 사실무근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일본 정부는 정책전환을 시도하였다. ‘불령’한 조선인을 학살한 책임을 자경단에게 전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 및 계엄 당국의 조선인 학살이라는 실책을 은폐하고, 그 책임을 자경단에게 전가하는 것이었다. 계엄사령부는 재향군인회에 주의사항을 하달하고 자경단의 단속에 들어갔다. 자경단의 활동은 도난과 화재 예방으로 제한되었고, 통행인 검문과 무기 소지도 금지되었다. 비판에 직면하게 된 자경단은 이에 반발하였고 경찰과 충돌하였다. 자경단의 일부는 국가 권력에 도전하는 불법세력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국가적인 폭력과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도쿄, 요코하마, 사이타마, 지바, 군마 등에서 자경단에 대한 검거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범죄의 흔적을 감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다. 자경단에 대한 재판은 국가권력에 대한 범죄 처벌이 중심이었으며, 조선인 학살이라는 죄목으로 실형을 받은 자경단은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4. 학살의 실태와 희생자 수

관동계엄사령부의 조사 보고서를 보면 계엄군이 조선인을 자경단으로부터 인계받아 보호하려고 연행하던 중에 저항하여 학살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조사 보고서를 그대로 믿기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학살사건에 대한 증언에는 보고서와는 다른 사건이 무수히 많이 있기 때문이다.

계엄사령부는 9월 4일에 조선인을 군 주둔지인 나라시노(習志野) 수용소에 수용한다고 결정하였다. 6일에는 훈령을 통해 조선인이 ‘불령’이나 양민이나에 관계없이 학살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 당국은 조선인을 대부분 보호 대상으로 설정하였지만, 이 사실을 조선인들에게 알려주는 조치는 없었다. 나라시노는 지진이 일어난 후 겨우 목숨을 건진 조선인이 다다른 곳이었다. 조선인 검속자는 군대 병

영이나 경찰서에서 전시 포로보다도 더 가혹한 취급을 받았다. 일부 조선인들은 보호라는 미명하에 나라시노까지 연행되어 또다시 자경단에 불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라시노 수용소는 조선인 사회주의자들이나 노동운동을 색출해내는 사상 검열의 장소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학살사건에 대한 조사 방해와 은폐 공작 속에서 몇 가지 희생자 수에 대한 통계자료가 발표되었다. 먼저 대표적인 것이 『독립신문(獨立新聞)』 사장 김승학의 지시로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실시한 희생자 조사이다. ‘재일본 관동지방 피해 조선동포 위문반’이 실시한 이 조사는 일본 당국의 감시와 방해 속에서 겨울까지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약 6,661명이 살해되었다는 통계를냄으로써 조선인 피해자가 6000여 명이라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또 다른 통계 자료는 다이쇼 9년의 대표적 잡지의 하나였던 개조사(改造社)의 의뢰를 받은 요시노 사쿠조가 작성한 자료이다. 개조사에 따르면 발표된 원고는 검열을 거친 결과 상당 부분이 생략되었다고 한다. 이 통계 자료의 출처는 앞서 기술한 ‘조선동포 위문반’이 실시한 10월말까지의 조사 자료이다.

이상 두 자료는 ‘조선동포 위문반’이 요코하마와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역을 상세하게 조사한 것이다. 특히 요코하마 지역은 지진 피해가 컸고 유언비어 전파도 빨랐으나 치안 회복은 가장 늦었던 지역이었다. 당연히 최대의 학살지로 주목되었다. 동시에 완전히 폐허로 변하여 범죄 흔적의 은폐가 이루어진 곳이었다. 따라서 ‘조선동포 위문반’이 남긴 이 지역 조사 자료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그 외에 일본 당국이 발표한 자료가 있다. 사법성 조사 결과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 자료로서 내무성 조사와 유사하다. 사법성은 조선인 희생자 수를 233명이라고 발표하였다. 내무성 경보국은 조선인 사망자 231명, 오인된 일본인 사망자 59명이라고 발표하였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조선인 피해자 수는 832명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들 각종 조사 통계 가운데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된 조선인은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선인이다. 피해가 심했던 도심 지역에 대한 통계는 보기 어렵고 명백한 범죄나 감출 수 없었던 사건만을 포함시키고 있다.

학살 희생자 통계 관련 자료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 희생자 수에 대한 명확한 통계를 내기란 어렵다. 강덕상은 관동대지진이전 관동 지방의 거주자를 2만 명이라고 상정한다면, 9,000명 정도가 행방불명되었다고 산정한다. 독립신문에 보도된 약 6,661명 희생자 통계는 실제 수에 상당히 가까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5.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기억하자

99년 전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사건은 일본 제국주의의 국가 범죄로 국제문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당국은 학살사건에 대해 사죄하지 않았다. 조선인 학살사건 책임자였던 미즈노와 아카이케는 내무대신과 경시총감에 재임명되었다. 학살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한 일부 자경단에 대한 재판과 처벌은 형식적인 것에 그쳤다. 일본인과 중국인 학살사건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 노동조합과 사회주의 세력은 책임을 추궁했다. 하지만 희생자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였던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침묵하였다.

재일 조선인에 대한 가해사실을 외면했던 결과는 현재까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일본 사회에서는 ‘혐한(嫌韓)론’과 외국인 차별과 헤이트스피치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자들이나 역사부정론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시 통계가 부정확하다고 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호도하고 학살사건의 본질을 흐리려고 한다. 당시 일본 사법성이 발표한 233명의 희생자 수를 강조하고, 재해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인 수가 적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조선인 희생자 수에 이의를 제기한다. 2017년 이후에는 도쿄 도지사가 연례적으로 추도문을 송부하는 것을 중지했다. 학살사건 관련 추모행사를 방해하고 추모비에 새겨진 역사적 사실을 문제 삼아 추모비를 쓰러뜨리려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렇지만 관동대지진 당시 학살사건은 결코 가릴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당시의 여러 자료에 근거한 연구와 무수한 증언이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1924년 3월에 작성된 독일 외무성 소장 자료는 2만 여명의 희생자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2013년에는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일본 진재시 피살자 명부’가 발견되었다. 조선인 희생자 290여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 명부 자료는 1953년 한일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사법성과 내무성, 조선총독부의 통계가 허구임을 대변해 주는 증거 자료들이다.

당시 조직적인 사건 은폐로 인해 조선인 피해자의 신원조차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와 관련 자료 등이 발굴되고 뜻있는 한일 시민단체들에 의해 추모비가 세워졌으며 정례적으로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행사가 거행되었다. 이를 계기로 역사문제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2023년에 관동대지진 학살사건 100주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사실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자를 기억하고 연구 심화와 함께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에도 힘써야 한다. 한일 양국의 시민들은 관동대지진 학살사건을 함께 기억하고 교훈을 계승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姜徳相・琴秉洞編, 1963, 『現代史資料6 関東大震災と朝鮮人』, みずず書房.
- 姜徳相, 1975, 『関東大震災』, 中央公論社.
- 山田昭次, 2003, 『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 創史社.
- 강덕상, 야마다 쇼지 외, 2013,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동북아역사재단.

※ 이 글은 집필자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동북아역사리포트』 지난 호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창간호) 보존과 철거의 갈림길: 일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의 현대사
- (제2호) 시진핑 시기 험한이 고조된 원인은 무엇일까
- (제3호)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와 현황
- (제4호) 중국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공정의 변화 -신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속 한국과 동북아-
- (제5호) 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그림자
- (제6호) 중국이 주장하는 '문화원조'의 배경과 문제점
- (제7호) 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8호)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제9호) '종번(宗藩)' 해석과 중국 대외관계 인식
- (제10호) 서양 고지도로 확인한 우리땅 독도와 동해 표기
- (제11호)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따른 대응 방안
- (제12호) (영문판)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13호) 일본 언론에 공개된 '독도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14호) 2022년 검정통과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 (제15호) 경찰 자료로 보는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의 성 계약' 비판
- (제16호)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의 동인(動因)과 쟁점
- (제17호) 중국인에게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 (제18호) 1947년 미 군정장관, 독도 출장을 허가하다
- (제19호)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했는가-
- (제20호)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관계 전망
- (제21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결의 과제
- (제22호) 광복 77주년,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 (제23호) 한국-중국 수교에 가려진 한국-중화민국 단교 30년